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 문재인 정부 사법부 주류가 바뀐다



-대법관 14명중 8명, 文대통령 임명… 진보색 짙어져
판결 변화 예상 3인 “사법부 신뢰회복 힘쓸 것”-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2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3명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총 14명의 대법관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8명(법원행정처장 포함)으로 늘었다.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9명으로 늘어난다.

신임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동료 법관,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대법원 1부에 배정됐고,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2부와 3부에 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색채가 짙었던 사법 권력의 지형이 진보 성향 우위로 바뀌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과 사법행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선별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이 심리하며 다수결로 판결을 정한다.



〈8월 2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한 신입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 대법관〉

또 사법행정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에서 인사와 재판 제도와 관련된 법원 규칙 등을 제정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사법제도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70년 대법원 역사 첫 ‘여대 출신’, 대법관 노정희 임명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정희 대법관(55·사법연수원 19기)이 대법원 역사 70년 만에 첫 여자대학교 출신 대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대법원이 생겼지만 여성이 대법관에 임명된 것은 반세기가 넘는 2004년이 되어서다. 역대 대법관 145명 중 여성 대법관은 6명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노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으로는 사법 사상 7번째, 여자대학 출신으로는 첫번째 대법관이 되었다. 현재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이 있으며 노 대법관이 취임함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노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1986년), 동 대학원(1996년)을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고 올 들어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노 대법관은 관사 시절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중증의 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며, 장애여성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 그 임원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명령 사유가 된다고 선고하는 등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거듭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차한성 前 대법관·권순일 대법관 등 전방위 수사



-일파만파 ‘재판거래’ 의혹 수사 어디까지 갈까-

재판거래 의혹 주요사건 시기별 관련자들

| 수사대상 재판거래 의혹 | 시기 | 법원행정처 주요 책임자 및 관련자 |
|---|----------|---|
|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사건 -재상고심 지연 검토, 외교부 협의 의혹, 행정처-청와대 면담 등 | 2013년 | -당시 행정처: 차한성 전대법관(처장), 권순일 대법관(차장), 임종현 전 차장(기조실장)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등 |
| 홍일표 의원 민사소송 -상고법원 법안 추진 협조와 홍의원 민사소송 거래 의혹 | 2013년 | -행정처: 차한성, 권순일, 임종현 -홍일표 의원 |
|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재항고 인용 검토 문건, 당시 주심 대법관 부당 지시 의혹 등 | 2014년 이후 | -행정처: 박병대 전 대법관(처장), 강형주 서울시선관위원장(차장), 임전차장(기조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사건 주심)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선고시기 조정 등 개입정황 | 2015년 | -행정처: 박병대, 강형주, 임종현 |
|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 보석 석방 -전 의원 민원접수 등 관리 정황 | 2015년 | 행정처: 박병대, 강형주, 임종현 -전 전 의원 등 |

| | | |
|--|--------------|---|
| <p>부산 법조비리 사건 -문모 판사 관련 리스트 검토(문건)등 개입정황</p> | <p>2016년</p> | <p>-행정처-고영한 전 대법관(처장), 임 종현 당시 차장, 이민걸 대법 사법연 구(기조실장)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 문모 전 부산 고법판사 -현기환 전 정무수석</p>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정부·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도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었던 전·현직 대법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면담까지 실행한 정황 등을 볼 때 당시 행정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8월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이 확보한 면담 기록에는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에게 주유엔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행정처장과 차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외교안보수석 면담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매개로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청탁하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과정에 전·현직 대법관이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의 재항고심 과정에서도 당시 주심 대법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두 달여 앞둔 2015년 6월 행정처 문건에서 검토된 대로 재항고가 인용돼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 전 대법관은 행정처가 201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관련 있는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당시 행정처장이기도 했다.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도 늘고 있다. 검찰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행정처와 주요 파트너가 된 정황을 잡고 밀도 있게 조사 중이다. 검찰은 행정처가 홍 의원 개인 민사소송을 챙기며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대한법조인협회 ‘양승태의 대한변협 압박 속 사법시험 존치운동 좌초’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진)는 8월 2일 성명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한 변호사협회 ‘압박’ 정황을 규탄했다. 당시 변협은 사법시험 존치를 성사시키려 했으나 좌초하고 말았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유력 법조단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변협과 변협 하창우 전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당시 변협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반대 의견을 낸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협 대응방안 검토’, ‘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라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문건 속에 적시된 대응 방안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 속에는 변호사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는 방안, 변호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국선변호인 공탁금을 줄이는 방안, 변협신문에 게재하는 대법원 정책광고를 끊는 방안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하 전 회장의 수임 내역을 조사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안, 하 전 회장을 ‘정치꾼’ 등으로 폄훼하는 여론을 변호사업계에 퍼뜨리는 방안 등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러한 행정처의 행태는 단순히 하 전 회장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이 있다.”며 “대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의 수장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뒷조사한 점, 법조 현안에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들러리로 세우려 한 점 등 모두 변호사들의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강조했다.

하 전 회장은 재임 기간 사법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임기 중 이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무척 애썼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방해 및 사법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대한법조인협회의 시각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변협 대응 방안, 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문건 작성에 관계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담당자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무매거진

문재인 대통령, 헌법 기관장 초청 만찬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국회의장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오찬 회동에서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이제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당부에 문 의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이 꼭 나와 있다.”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 관련 입법 처리를 당부한 것은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8월 7~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8.0%였다. 갤럽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이 가장 많았다.

이낙연 총리도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이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헌법 기관장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번에 의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언급하셨다.”며 “미처 보완하지 못한 법률의 미비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네 번째이며, 지난 5월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한 지 석 달 만이다.

(중앙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검찰총장 후보추천에 법무부 입김 뺀다...
검찰국장 참여 배제

- 검찰개혁위 개선안 권고, 장후보추천위 민간위원도 국회가 추천
- 정치적 중립성 위해 검찰인사제도 대폭 개선, 정안 마련 방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원에서 빼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 중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 과반이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혁위는 추천위 구성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추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두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원 중 골라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의 추천후보 수도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문 총장은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 인사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하는 대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해 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원칙과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찰인사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일선 검사가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평정항목을 평정대상자의 직위와 직무유형별로 다양화·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자신에 대한 복무평정 요지를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헌법기구로 도입한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도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용)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

법조인 동정

지난 2018년 8월 1일(수) 10:00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있었다.

고영한 대법관은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퇴임사를 통해 고영한 대법관은 “대법원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여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 또한 오늘의 우리 사회에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창석 대법관은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창석 대법관은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합헌적 해석을 통한 헌법가치의 실현이 법령의 위헌성 선언을 통한 헌법가치의 실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 사법부가 수행하여야 할 너무나 중대한 책무이기에 법관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합헌적 해석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며 퇴임사를 남겼다.

김신 대법관은 1983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하여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상고제도 전반을 잘 살펴서 적절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하였습니다.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으로 6년 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 하였다.